

주요 국정홍보 ①(세계인이 찾는 관광대국 실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문화체육관광부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12.12.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방문

관광수입 300억 달러 달성

K-컬처의 매력을 무기 삼아 관광대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국가 실현

K-컬처 호감도를 관광 수요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규제개선으로 관광 생태계를 확장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 시대 구현

지역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㉔(2030년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디지털+바이오 융합으로,
2030년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발표 12.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국정과제 75-3번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실현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바이오-디지털 융합 촉진과 공동기반기술·인프라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합니다.**



* 5대 인프라 | 바이오파운드리, DNA 암호화 화합물은행, 휴먼 디지털트윈, 바이오소재 플랫폼,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
12대 핵심기술 |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줄기세포 치료기술, AI신약 플랫폼, 오가노이드, 첨단뇌과학,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바이오닉스, 디지털그린 팩토리, 마이크로바이옴, 첨단 신약, 병원체 극복기술

4대 추진전략 주요내용 1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창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활용, 신개념 연구·산업 육성

- 첨단뇌과학 연구 및 사업화 지원('23~'32, 4천억원)
- 전자약·디지털 치료제 상용화('26) 등

바이오기술로 의약품·소재·제품 등 제조산업 혁신

- 합성생물학 핵심인프라 바이오파운드리 구축(3,000억원 규모 예타 기획)
- 식물('23~'30)·마이크로바이옴('23~'27) 기반 유효물질 발굴·생산 기술 확보

새로운 기전·접근방식에 기반한 질병대응 역량 강화

- 단백질 분해 시스템 조절(프로테아좀), 면역세포 유전자 리모델링(CAR)
- RNA·펩타이드 기술을 활용한 신약물 원천기술 개발('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데이터 기반 유전자·세포 분석 및 제어기술 고도화

-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술 효율 2배 향상
- 조직별·세포기원별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 DB구축 및 제어기술 확보('23~'27)

In silico 예측기술로 연구속도와 성공확률 향상

-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플랫폼 기술 고도화('22~'26)
- 생명체 기능분석·모델링 및 설계·예측 가능한 휴먼디지털트윈 개발('22~)

소재→발굴→평가검증 최적화·고속화 지원

- 바이오소재 통합 포털시스템 구축('21~'26, 3,327억원)
- DNA 바코드 화합물은행 구축('23~'27) 등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국가 데이터 허브 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공유기반 조성

-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공유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구축('21~'26, 1,780억원)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생산·축적·관리 기반 마련

- 고품질 데이터 생산을 위한 임무지향적 사업 기획('23)
- 데이터 표준등록양식 제·개정('23) 등

바이오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으로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 클라우드 기반 가상 협업·분석 환경 구축('22~)
- 바이오 난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23~'27) 추진 등



디지털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

디지털바이오 R&D우수성과 발굴 및 후속 사업화 지원

- 바이오 기술성장 경진대회 개최,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검증 역량 강화 지원 등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국제공조 확대

- 산학연 전문가 참여 협의회 운영 추진(23),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컨퍼런스(22.12) 등

융합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융합연구 지원

- 현장 프로젝트 중심 융합프로그램 기획(23), 의과학자 양성(23~26) 등

디지털바이오 기술 육성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개선

-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착수(23~), 민관합동 바이오 규제개선반 본격 운영(23~) 등



주요 국정홍보 ⑧(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8)

- ✓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
- ✓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

상생협력법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 ②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 ③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⑤ 중소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관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 ⑥ 중소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⑦ 중소기업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주요 국정홍보 ④(미래 도심항공교통 구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국토교통부X스타트업X청년재단
제6회 '커피챗' : UAM

국토교통부

Fly into the Urban Sky
도시, 하늘을 날다

'2022도심항공교통 (UAM) 비행 시연'

K-UAM이 우리 생활 속으로! 3
미래 도심항공교통을 구현합니다

UAM 비행 기체 시연 프로그램



지난 23일, 김포에서 **'2022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드론택시, 플라잉카, 에어 택시 등으로 불리우며 항공기 기체 뿐만 아니라, 교통관리, 이착륙 시설, 교통서비스 플랫폼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UAM(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행사장 내 버티포트 시연 프로그램



버티포트 시연

최초로 우리 기업들이 제작한 기체 비행 시연 진행과 함께
기체 개발을 장려하고 자체 기술을 홍보하는 행사였는데요,

UAM 기체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 **버티포트!**
버티포트를 실제로 조성하여
우리 도심 내에 들어설 **UAM 기반 인프라 시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UAM 이용 시연 프로그램

			
#1. 예약 (서비스 앱으로 예약)	#2. 자율주행차 탑승 (연계교통 탑승)	#3. 버티포트 도착 (도심 속의 버티포트 구현)	#4. 수속 (간편한 수속절차 적용)
			
#5. 탑승 (UAM 기체 탑승)	#6. 도심비행 (UAM 기체 비행 모습 연출)	#7. 착륙 (목적지의 버티포트 도착)	#8. 이동 (착륙 후 행사장으로 이동)

UAM 이용 편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예약부터 수속, 탑승, 착륙 등의
UAM 이용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2022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

국토교통부X스타트업X청년재단
제6회 '커피챗' : UAM



시연행사와 함께 제 6회 커피챗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육상·항만 연계 항공물류 관리 스마트 통합 솔루션 스타트업

'로비고스' 김태용 대표,

드론 배송 솔루션 및 UAM 통합관제 플랫폼 스타트업

'파블로항공' 김영준 대표,

커피챗에 참여한 청년들과 함께 UAM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UAM 산업의 일자리 전망은 어떠한가요?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UAM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9,90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시장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블로항공 대표
김영준



파블로 항공의 기술력으로 변화되는 미래의 모습은?

UAM 드론 택시 뿐만 아니라 지상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지상로봇 등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빌리티와 통합될 수 있으며, 그 시스템을 통해 물류를 배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PABLO AIR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UAM 스타트업으로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로비고스 대표
김태용

큰 이정표를 잡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비고스의 기술력으로 변화되는 미래의 모습은?



드론을 기반으로 한 실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만 시스템과 육상시스템과의 연동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운영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하나의 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PABLO AIR

“

‘2022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을 통해
한층 우리에게 가까워진 UAM 풍경!
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편리한 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빌리티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

주요 국정홍보 6(5년 후 대한민국 청사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5년 후 대한민국 청사진' 12.15.



주요 국정홍보 6(흔들림 없이 노동시장 개혁)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전문가 간담회(12.16.)

**흔들림 없이
노동시장 개혁
완수하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12.1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50명의 노사, 전문가 등과 약 5개월의 논의 끝에 노동시장 개혁 방향과 과제를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 ✓ 주52시간 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휴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 강화**
-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방안 포함
- ✓ 파견, 노조설립 등 그 동안 외면해 왔던 **의제들에 대한** 개선 논의 제안

향후 개혁 추진 방향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부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는 사회적 논의 착수
- 조선업 등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토대로 한 파견제도 개편 등 추진

✓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전반의 제도개편 추진
-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권익보호 방안 마련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모두가 잘 사는 따뜻한 노동시장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불법·부당한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12.14.



경북 사용전력 25% 생산 차세대 원전 신한울 1호기가 국민경제를 뒷받침합니다



겨울철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합니다

연간 발전량

✓ 10,424 GWh

경북 소비량 25%

전국 전력예비율

✓ 1.6 %p

▲ 상승

연간 LNG 수입 대체

✓ 140만톤

26억 달러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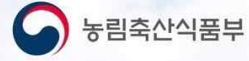
'핵심기술 국산화' 국내 최초 원전으로서 수출을 이끌겠습니다

✓ 차세대 한국형 원전 + 핵심기술 자립

✓ 2030년 10기 수출 목표 달성 기여

주요 국정홍보 8(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부작용)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 ① 쌀 공급과잉은 심화되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합니다.
- ②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③ 재정 부담 증가 및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가 줄어듭니다.
- ④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과잉생산이나 가격하락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은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주는 '자동시장격리제'를 의미합니다.

* (초과생산량)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또는 (쌀값) 수확기(10~12월)·단경기(7~9월)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

쌀 공급과잉은 심화되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생산을 부추겨
공급과잉이 심화됩니다.
이로 인해 쌀값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하여,
2030년에는 17~18만 원/80kg 수준의
낮은 가격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농타작물재배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생산량은 43만 톤 수준이며,
산지에서 거래되는 쌀값도 현재(18.7만 원/80kg)보다
낮은 수준인 17~18만 원/80kg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쌀은 과잉인 반면 밀·콩은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안보의 핵심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을 부추기고 밀·콩의 생산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 식량안보의 핵심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재정 부담 증가로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가 감소합니다.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안정과 미래 농업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농업발전에 악영향을 줍니다.

* (재정부담) 격리 의무화에 따른 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는 1조 4천억원 정도 소요 전망됩니다.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업 예산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 고추, 마늘, 축산물 등 쌀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도 어긋납니다.

정부는 쌀 과잉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정책현장

국가전략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2022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2023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각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
-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최근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화하며,
- 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과 산업
부처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며, 확정된 정책금융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자금집행 실적을 주기적 점검 및 정책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하겠습니다.
- ✔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여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재해 피해농가 지원 확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자연재해 피해농가 농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12.12.



#상환연기 #이자감면

증가하는 이상기상 자연재해 피해 농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재해 피해를 입더라도
일부 농업 정책자금 이용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11일부터 지원대상을 전체 정책자금 이용자로 확대했습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피해농가 금융지원 확대

대상 자금 갯수

4개 → **54개**

대상 자금 규모

2.1조원 → **22.6조 원**

주요 국정홍보 ①(경찰의 역량, 책임성 강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행정안전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12.19.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도록 경찰의 역량,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 주요 직위에 현장 경험 풍부한 경찰이 임명되도록 개선
- ✔ 인력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 치안시스템으로 전환
- ✔ 헌신적인 우수 경찰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
- ✔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해 기본급 단계적 인상(순경~경정)

주요 국정홍보 ㉞(2023년 3대개혁 추진 원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
2023년은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성장의 원동력

2023년 경제정책방향

3대 개혁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입니다.
노조부패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민생경제의 기본

가계 지출 중 가장 중요한 주거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육성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출과 스타트업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두 개의 축으로
2023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2023년 경제정책 방향)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① 거시정책 조합

- 건전재정 유지하며 경기대응 강화
- 정책 금융 45조원 확대 [495→540조원] **사상 최대 규모**


② 금융시장 안정

-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
-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
- 금융·외환시장 안정

③ 잠재리스크 대응

-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
조기회생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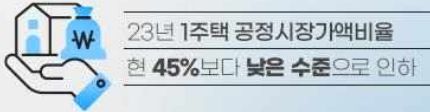


④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거래주체로서의 역할강화



• 실수요자 규제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부동산규제 정상화
부동산시장
안정화

23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임대차 시장 안정화 도모

민간 등록 임대

공공임대

- 등록임대 복원
- 세제 인센티브 제공

공급 확대 및 질적 개선

⑤ 에너지 위기 대응

•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인프라 지원





① 물가 안정

경유·LPG 유류세 인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공공요금 가격안정 도모

② 생계비 부담 경감

•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6개월 연장
- 학자금 대출금리 '22년 수준(1.7%) 동결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

•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대출한도 한시증액
1년 연장

③ 약자복지 확충

•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부과

•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④ 고용 안정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청년 17만 + α명 지원

고령층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3.1)

중장년 맞춤형 채용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여성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 해소

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릴레이 행사 개최



여행가는 달, 문화가 있는 날 확대



① 수출 활성화

-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수출인프라 확충



무역 금융 규모 역대
최대 수준 확대
(35T→360조원)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
(신설)



② 투자촉진·규제혁신

-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세제 투자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금융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

- 규제 혁신 가속화



「경제 규제혁신 TF」 통해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③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 마련
 -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
 -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추진

⑤ 공정시장 구현

-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

④ 중소·벤처활성화

-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총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① 3대 구조개혁



노동개혁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제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교육개혁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연금개혁

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본격화

② 3대 경제혁신



금융혁신

가상자산 규율체계 단계적 마련, 제3자 FX 허용



서비스혁신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R&D 확대 등 통한 혁신 가속화



공공혁신

건전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③ 인구·기후위기 대응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과제 발굴



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기업과 개인이 참여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④ 경제안보 강화



선제적 위험관리-즉시 대응 시스템 구현



투자유치 및 분야별 대응역량 강화

⑤ 상생·지역균형 발전



기부여건조성



ESG 인프라 고도화



지방투자 확대

주요 국정홍보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수출 3대 애로 해소

무역 금융

- ✓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 ✓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용자(2.7%p 금리우대) 신설

인증

- ✓ 해외인증지원단(국표원) 설치를 통한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 확대 (120개→150개)

마케팅

- ✓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대상 확대('22-년) 624개사 → ('23-년) 1,000개사)
- ✓ 스타트업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신규 지원
- ✓ 전문무역상사 육성(330 → 400개사) 및 지사화 사업

수출 마케팅·인증·물류 예산의 2/3(9천억원) 상반기 집중 투입

수출 저변 확대

청년 무역인 양성

- ✔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 가동
➔ 매년 1,500명 양성으로 '청년 수출붐' 조성

디지털 무역 확대

- ✔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충 (고양, 인천, 부산 등 6개소 신설)
* 콘텐츠 제작, 입점, 매칭,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의 전 주기 지원
- ✔ 화상상담 확대, 상품정보의 디지털화 지원 등
➔ '국민 누구나 수출하는' 환경 조성

시장맞춤형 수출전략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 추진

아세안	생산기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 →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 확대
중동	탈(脫)석유, 산업화 정책 →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 확대
중남미	신규 FTA 체결, 한류 붐 →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자원부국과의 광물협력을 강화
아프리카	IT 수요확산, 보건·식량문제에 대응 → 기술지원 등 ODA 고도화를 통해 의료, 스마트팜, ICT 진출 확대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하여,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및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장의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실버·엔젤·싱글용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주 목표

원전

- ✓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 차질없이 추진
- ✓ 신규 시장(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 상시 가동

2023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 목표(금년수준)

방위 산업

- ✓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 강화
- ✓ 민군 겸용 기술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 계획

2023년 300억달러 수주 목표

해외 플랜트

- ✓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다겟팅하여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 강화

☞ **全 부처의 수출역군化**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가동**

☞ **수출카리반 운영**

➔ 지역맞춤형 수출대책 마련 및 시장개척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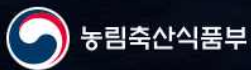
➔ 수출 애로 신속히 해소

주요 국정홍보 ⑥(식량안보 체계 구축)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국제정세 불안 등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 구축



전략작물직불금
신설을 통한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스마트농업·기계화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



농지보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



농업 진흥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新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내 비축 확대 및 新수요 창출



밀·콩·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설
신규 조성



국내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한
新수요 창출



취약계층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민간 전문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선제적인 수입선 다변화 지원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밀까지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확대



**정부는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⑥(경찰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브리핑 (12.19.)

경찰의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 첫째,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합니다.

* 총 58개 직위에 복수직급제 도입되며, 이를 통해 순경입직자 및 지방군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지고 현장대응력이 높아집니다.

☑ 둘째,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조직과 사무를 정비**합니다.

☑ 셋째,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합니다.

☑ 넷째,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

정부는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는 치안역량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 [경제영토를 우주까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경제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주재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12.21.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가우주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 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안건1.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안건2.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안건3.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①

2045년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범부처 종합 전략 제시
우주개발투자 ('27) 1.5조원('21년 0.73조원), 세계시장 비중 ('45) 10%('20년 약 1%)

5대 임무 |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향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Mission) 설정

- 우주탐사 확대**
 - “우주 경제영토 확장” 독자적 우주탐사 계획 추진
 - 목표 ('32) 달 착륙 ▶ ('45) 화성 착륙
 - * 달 : '32년 무인착륙·표면탐사 → '40년대 달기지 확보
 - 화성 : '35년 궤도탐사 → '45년 화성 착륙
 - 전략 무인탐사 능력 독자 확보, 유인·정거장·탐사기지 등은 국제협력 통해 전략적 추진
- 우주수송 완성**
 -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우주수송 능력·거점 완성
 - 목표 ('30년대) 무인수송 ▶ ('45년대) 유인수송
 - * 발사능력 : '32년 차세대 발사체 → '45년 유인수송 발사체
 - 제조·인프라 : '30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 전략 다양한 발사체·발사장과 제조 클러스터 구축, 민간 주도 수송 서비스 창출 및 경쟁력 확보
- 우주산업 창출**
 - “우주산업의 주력산업” 세계수준 산업 생태계 구축
 - 목표 ('30년)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 ▶ ('45년) 10대 주력산업 진입
 - 전략 정부·민간 협력 우주산업 초기시장 창출, 강점분야 연계 등을 통해 산업 발굴·확대 및 세계시장 진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②

4 우주안보 확립

“국민의 안전한 삶” 대등한 국제공조 가능한 역량 확보

목표 ('30)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 확대 ▶ ('40) 국제공조 기여

전략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자산 확충

* 지상 재난·재해 활용, 우주상황인식·교통관리, 국가안전 확보 등

5 우주과학 확장

“인류 지식확장에 기여”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 확대

목표 ('30년대)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 확보 ▶ ('40년) 세계선도형 임무 주도

전략 우주탐사·과학 임무 발굴 체계 확립 및 장기적 우주과학 연구 프로그램 도입

안건 ① 주요내용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③

2대 전략 | 주요내용

우주경제 기반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 전환을 통해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 창출

선도형 거버넌스

정부 예산 2배로 확대(~'27),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 혁신

우주 전문인력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지변확대, 우주중점연구실·미래우주교육센터 확대

글로벌 리더십

국제공동사업(아르테미스, 문투마스 등) 적극 참여, 신흥국·개도국과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 확대

첨단 우주기술 확보

발사체·인프라

차세대·누리호·소형 발사체 포트폴리오 완성, 기술의 민간 이전 통해 민간서비스 창출

위성·서비스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 지속적으로 확충, 민간 주도의 개발·서비스로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건 ② 주요내용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 주도 우주산업 본격 육성 위해 '대전, 전남, 경남 3각 체제' 최종 확정



1 발사체 특화지구 | 전남

-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 기 구축
- 발사체 산업 육성 위한 최적의 여건 보유

앞으로 특화 산업단지 조성,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 추진

2 위성 특화지구 | 경남

- 위성 산업의 중심점 역할 수행할 체계종합기업과 관련기업 집적
-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 보유

앞으로 특화 산업단지 조성,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위성제조혁신센터 건립 추진

3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 대전

-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밀집
-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인프라 보유

앞으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 중점 추진

안건 ③ 주요내용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한반도 지역의 신속한 관측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수립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착수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

* '22.12월~'30년, 총사업비 1조 4,223억원, 위성체·지상시스템 등 개발·구축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기획·사업 추진

* 참여부처 : 과기정통부, 국방부(방사청), 해경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국정홍보 ㉞(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12.26.



학교 밖 청소년 약 14만 6천 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미진학 학생 정보 등 신속 연계
- ☑ 대면 서비스 기피 경향 등 고려해 확장가상세계지원센터 구축
- ☑ 진로 동기 강화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확대 등 대학 진학의 기회 더 넓게 보장

주요 국정홍보 ㉞(숫자로 본 윤석열 정부 성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해 성과





화물연대 첫 업무개시 명령
국민경제 피해 최소화



2

만나이 통일로
최대 2살 ↓



3조 원 규모

이집트 엘바다 원전 수주



7대 우주강국 도약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성공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10



자립준비청년·청소년 등 자립수당
월 **10만 원** 인상 (30 → 40만 원)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 개최

40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 공식방한

THE OFFICIAL VISIT OF
HIS ROYAL HIGHNESS MOHAMMED BIN SALMAN, CROWN PRINCE AND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O THE REPUBLIC OF KOREA
NOVEMBER 16 - 17, 2022



40조 원대 투자협약
‘제2의 중동붐’



278만 명 청와대 관람

주요 국정홍보 ㉔(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1.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합니다.



- ✓ 독자적 우주탐사기술 고도화
누리호 3차 발사 추진,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



- ✓ 우주산업 육성
'23년 우주기업 450개



- ✓ 우주항공청 설립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

2. 민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합니다.



- ✓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
'23년 양자·차세대 원전 착수 및
8개 추가 선정



- ✓ **통합형 자원배분 및 평가 내실화**
(기존) 부처별 자원배분 →
(개선) 범부처, 국가적 목표 고려 자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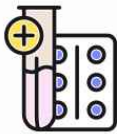


- ✓ **12대 전략기술의 기술자립 달성**
전략기술 투자 전년대비 10% 확대

3. 신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을 선점합니다.



- ✓ '30년대 양자 4대 강국
국가퀀텀전략 발표



- ✓ 첨단바이오 집중 육성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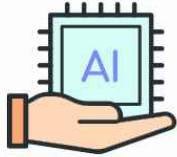


- ✓ 혁신형 SMR 착수
'28년 표준설계인가획득



- ✓ '26년 pre-6G 최초 시연 추진
기초·상용화 기술 병행 개발

4. 디지털을 일상화·전면화 합니다.



- ✓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돌봄로봇, 지능형 CCTV, AI 진료 등



-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행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스마트 국회·법원 지원



- ✓ 전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1,000개)

5. K-디지털이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 ✔ 디지털 신질서 법제화 및
글로벌 논의 주도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G20·OECD 등에서 뉴욕구상 공유



- ✔ 국내 디지털 기업 및 OTT의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국제협력을 통한 세일즈 외교



- ✔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극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
K-클라우드 모델의 글로벌 진출

6.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합니다.



- ✓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추진,
위기관리 대응체계 상시화



- ✓ 디지털 기반 국민 '안심' 제고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지능형 CCTV를 통한 범죄 예방



- ✓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격오지 초고속 인터넷 보급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7.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합니다.



- ✓ 신진-중견-석학급 인재
성장 연계 지원
'국가과학기술자' 지정



- ✓ 민간주도 디지털 인재양성 확대
캠퍼스 SW 아카데미 등의 전 주기
인재양성 체계 확산 ('23년 1만명 이상 양성)



- ✓ 해외 인재의 유입·정착 지원
사이언스 카드 혜택 확대,
세계 한인 과학자 대회 개최

8. 지역의 과학기술·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 ✓ 중앙-지방 협업 혁신계획 마련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계획 수립



- ✓ 지역 연구역량 확충
지역수요 기반, 국가전략기술 R&D와
지역 미래산업 간 연계 강화



-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및 고도화
지역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 강화

주요 국정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2023년 중소기업부 업무보고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신산업·신시장 개척의 첨병, 창업벤처 집중 육성

- ✓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니콘 창출
- ✓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 ✓ 승자독식 모델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벤처로 재탄생

단단한 우리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드라이브
- ✓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 촉진 및 고부가가치 R&D 확대
- ✓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질서 마련

우리동네 생활혁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백년가게

백년가게

MealKit Smart R
CARRY ON A

백년가게
30년 이상
유지하면서
수도권 고객
확대를 위한
전략을 세운
점포 가운데,
기업가형에서
장기 가능성을
확인한 점포
를 선정합니다.

- ✔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
- ✔ 소상공인 스마트·온라인 전환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 ✔ 전국민 상생소비 지속 및 대기업-전통시장 상생 확대

현장 위기극복·규제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 가동



- ✓ 복합위기 중 건강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 구축
- ✓ 기업인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걸림돌 제거
- ✓ 기관·지방청, 전부처와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 결성

주요 국정홍보 ㉞(소규모 사업장 노사어려움 지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전국 기관장 회의(12.30.)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사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1 계도기간 1년('23.1.1~12.31.) 부여

- 계도기간 중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
-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 시정 기간 부여
- 계도기간 연장 여부는 이후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검토

2 근로시간 컨설팅 지원,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3 업무량 폭증, 돌발 상황 발생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활용 안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동향 모니터링

- ✓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 ✓ 신속취업 지원 TF등의 내실있는 운영

외국인력 활용 지원

-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 한시적 연장(~23년)
- ✓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율점검기간 운영
(’22.12.29.~’23.1.31)

- ✓ 노조법에 규정된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조치 요구
- ✓ 점검기간 종료 후 서류비치 및 보존여부 보고 요구
- ✓ 점검결과 미제출, 서류 미비치 등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요 국정홍보 ㉞(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출생일 **12월 31일**생이 **다음날**이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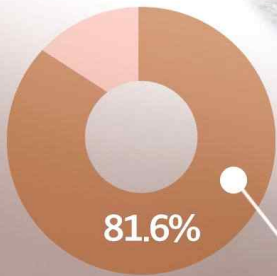
- | | |
|-------------------|-------------------------------|
| 세는 나이 ▶ 2살 | 출생일부터 1살 다음 해 1월 1일 1살 증가 |
| 만 나이 ▶ 0살 | 출생일 기준(0살 시작)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
| 연 나이 ▶ 1살 |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



제각기 **다른**
우리들의 **나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여러 분쟁과 갈등 사례

많은 국민이 원하는 **'만나이' 통일**



나이는 만나기로 통일되어야 한다.

법제처에선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 (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일 공포(12월 27일)** 되어
6개월 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만나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이나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나리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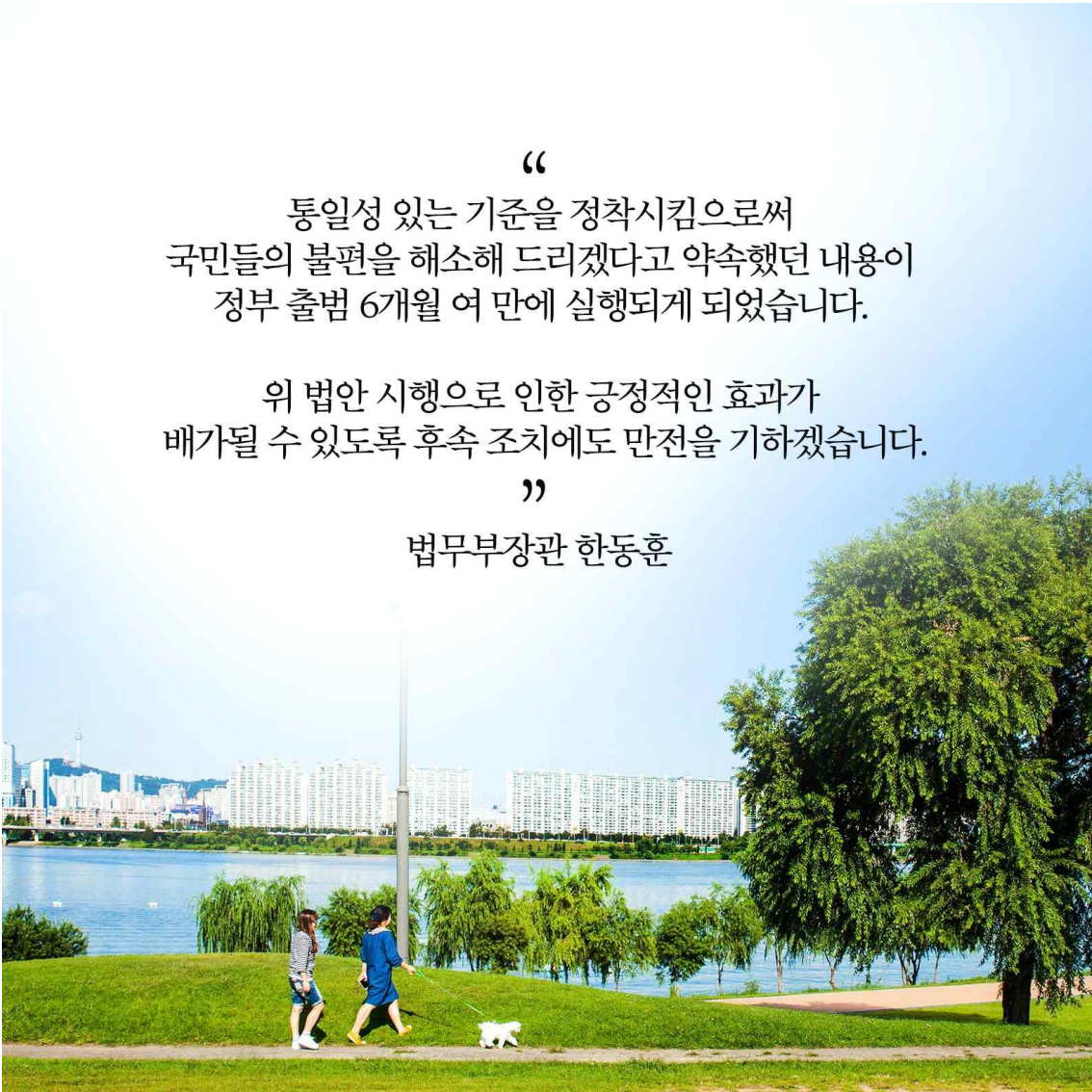
“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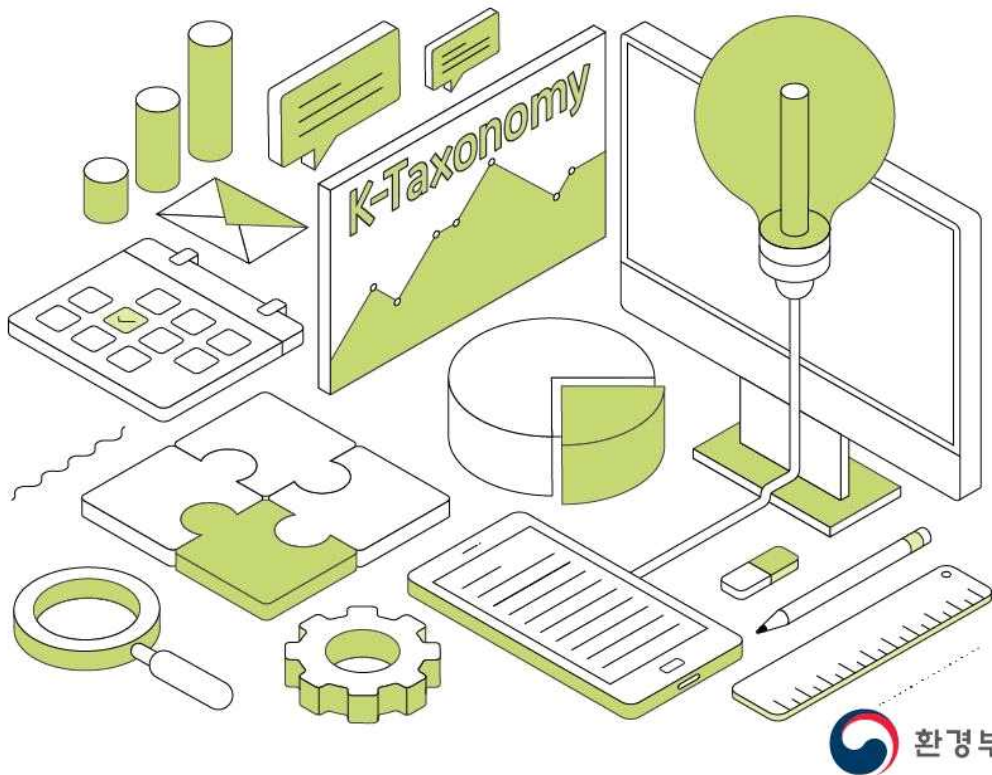
법무부장관 한동훈



주요 국정홍보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란?

녹색금융 활성화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2021.12



발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2022.4~11



시범사업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022.12.23



개정

공통 분야, 원자력, 기후변화적응 등
녹색분류체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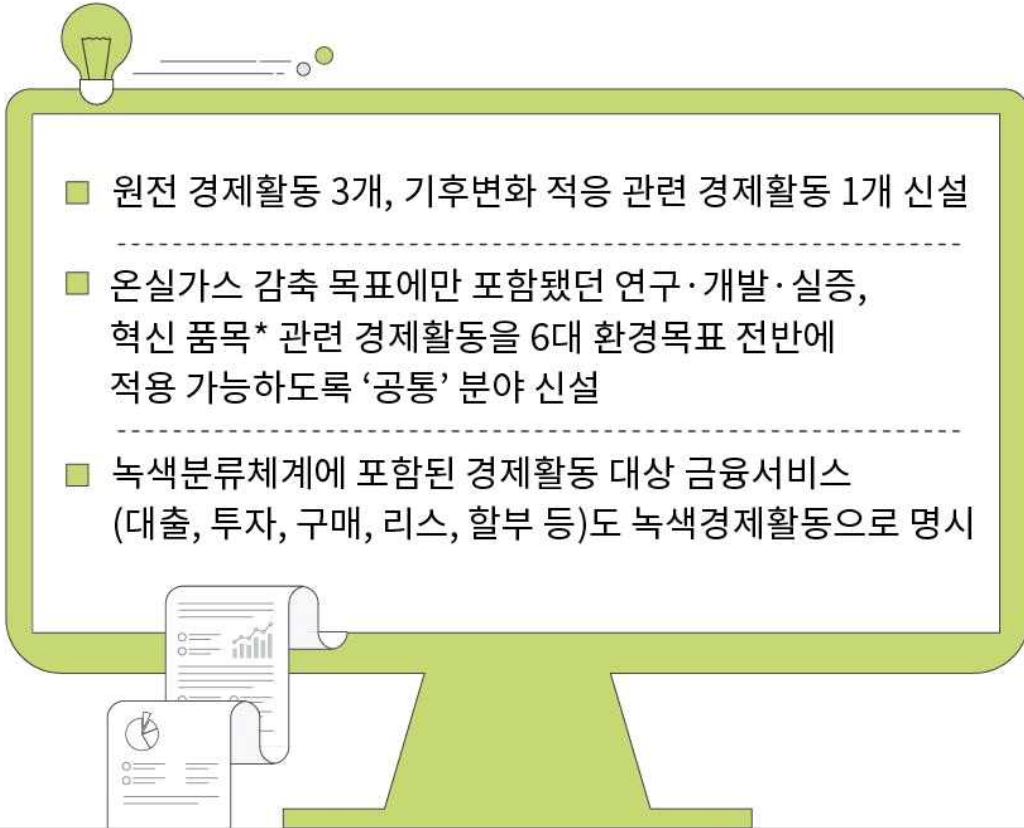
2023.1.1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장 본격 적용

지침서 개정 주요 내용



*「혁신성장 공동기준」(’22.1,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제시한 품목을 기반으로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과 관련된 품목을 선별

녹색분류체계 정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홍보 추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 확대 추진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www.gmi.go.kr)에서 확인하세요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